

# 문화전당 484억 반영...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노력

## 정부 내년 예산 편성...광주·전남 반영·누락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상당수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됨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활동이 주목된다.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업은 '예산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자동차 100만대' 예산 확보 속제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예산안보다 1000억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애초 건의한 예산은 253건 2조1832억원으로, 최종 정부 예산안에 80.9%만 반영됐다.

반영된 정부 예산안 중 분야별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 개발(484억원)을 비롯한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0억원) ▲고싸움 놀이 전수 교육관 건립(11억원) 등 문화·관광 사업이 45건 871억원이다.

경제협력관 산업 육성(112억원)과 ▲수소융합충전스테이션 플랫폼 실증단지 구축(5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설립(73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120억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연구개발 등 신성장동력 사업은 68건에 2263억원이 반영됐다.

사회간접 자본(SOC) 확충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83억원) ▲권역별 화물터미널 조성(23억원) ▲광주순환도로 2구간 건설(985억원) 등 36건, 3675억원이었다. 사회복지 및 생태환경 분야 사업비는 49건에 1조653억원이었으며, 민주·인권, 안전체계 구축 사업비는 18건, 202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동차 100만대 사업'(403억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세부계획 확정과 국비 보조율 협의를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실증단지 구축 등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50억원)도 이전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밖에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48억원), 월전동~무진로 도로개설(24억원) 사업비도 반영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상임위·예결위원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증가 속 무안공항 활성화 등은 누락 = 전남도의 경우 예산에 반영된

## 광주 복지·환경 1조 650억

## 남해안철도 1561억 반영

## 국회 심의 과정 노력 절실

주요 SOC 현안사업은 ▲남해안철도(목포~보성)는 건설(1561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820억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로 건설(988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550억원) ▲영광~해제 간 칠산대교 건설(268억원) ▲지도~임자 간 국도시설개량(296억원) 등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15억원)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15억원), 무인기 개발 성능시험 평가기반구축(27억원) ▲농수산업 무인기 실증테스트베드 기반구축(4억원)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10억원) 등 미래신성장 동력을 이끌 신규 사업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광주~순천 간 경전선 철도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등 추가 또는 증액이 필요한 기반 시설사업 등은 줄줄이 누락됐다.

여기에 ▲수송기용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 ▲친환경 바이오 화학 복합소재부품 개발사업 ▲무인기 인증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지역전략

## ■ 주요 신규사업 반영현황(단위: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7 반영액
<b>광주</b>		
에어가전 혁신 지원센터 구축	223	15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250	15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 및 국제 표준화	460	51
남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	267	10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100	20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197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자원화	45	10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47	11
노후하수관로 교체·개량사업	479	15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지원	292	2
<b>전남</b>		
신안경찰서 신설	300	12
미래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사업화 플랫폼 구축	214	15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836	15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150	10
조류발전 실해역시험장 구축	280	7
응급의료 전용헬기 중형 전환	245	28
동물복지형 한우 사육단지 조성	483	50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1.869	67
여수국제교육원 건립	350	150
호남 119 특수구조대 신청사 건립	1.082	12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를 비롯 더불어민주당·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장 관계자들이 30일 낙동강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으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이었지만 예산 안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는 오는 9월 2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 심의 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개별 접촉하고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 감사에서 예산 관련 대정부 질의에 나서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서면 질의서를 우선 접수하고, 이 지시와 우기중 정부부지사 등이 상시적으로 국회를 찾아 예산을 챙기겠다는 각오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신세계문화나눔터에서 열린 전국 여성위원회 워크숍에 참석, 강연하기 앞서 여성들과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안철수 나란히 부산 찾아 'PK 민심잡기'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나란히 고향인 부산을 찾아 부산·경남(PK) 민심잡기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더민주 부산시당의 낙동강 현장점검에 동행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하면 죽어버리는 재앙이 올 것"이라며 "대책은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 당시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댐 상수원수가 2급수로

떨어졌을 때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1급수로 회복시킨 바 있다"며 "낙동강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대선에서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다고 확신한다"며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를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과 함께 정권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의 식수원인 팔당댐 상수원수가 2급수로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3자 대결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라며 "결정히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부산진구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산 워크숍에 참석한 뒤, 영남지역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시민사회단체인 '뉴프런티어 희망모임 창립대회'에서 강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더민주 사드 호흡 조절...당론 결정 연기

### 토론회·의원총회 거쳐 결정키로...새누리는 사드 찬성 만장일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 결정 일정을 연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번 주로 예정된 토론회를 다음주로 미루고 당론은 그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 "민생은 민생이고, 사드는 사드"라며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또 성주참외를 들고 "참외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과 사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이날 오후 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사드 토론회에서도 "사드배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여론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대표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당론은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자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추 대표는 이날 민주정책연구원 토론회, 31일 전문가 토론회, 다음달 2일 당 워크숍을 한 뒤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 대표는 전날 31일 이후 일정의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논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국민 여론도 사드배치 찬성이 더 우세하다는 점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감안,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급작스러운 당론채택이 자칫 '김종인 지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정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 개개인이 사드에 반대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자칫 여론이 짜놓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오늘 당론을 정했는데, 우리도 바로 정하면 9월 정기국회가 '사드국회'가 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드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승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당내 사드 배치에 큰 이견이 없음에도 당론을 채택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기에 더 안전한 수력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지구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안전최우선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원전운영으로 지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